



# 보도자료

책임자 오병국 연구위원(금융소비자연구실, 3775-9021)  
작성자 오병국 연구위원(금융소비자연구실, 3775-9021)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3775-9115)

보도 2022. 11. 24(목) 14:00부터  
배포 2022. 11. 23(수)  
매수 총 4매

## 보험연구원, 「퇴직연금 연금화(Annuitization) 확충 방안」 세미나 개최

###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퇴직적립금 연금화 확충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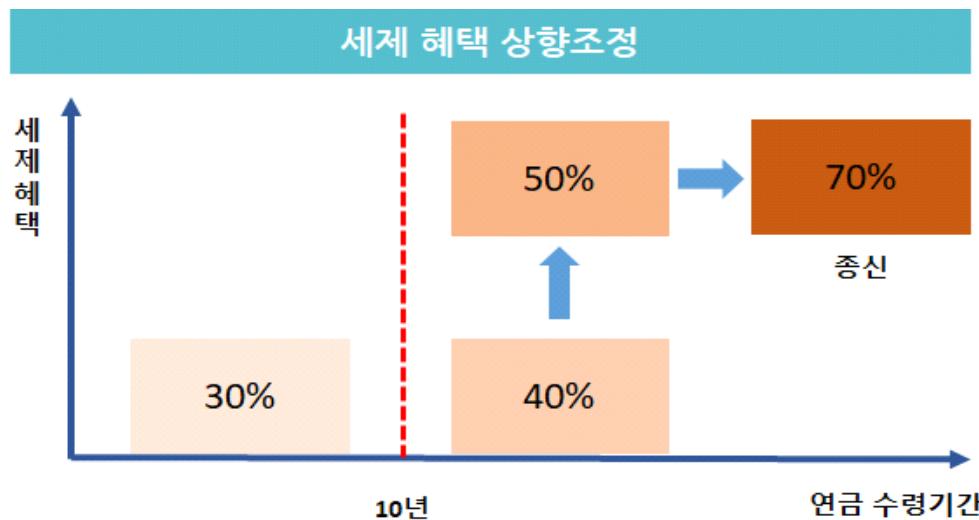
- 보험연구원과 연금학회·국민연금연구원은 팬데믹 이후 보험산업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하여 11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 『퇴직연금 연금화(Annuitization) 확충 방안』 세미나를 개최함
- (주제발표 1) 오병국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퇴직연금 연금 수령 유인 관련 세제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주요국의 퇴직연금 연금 수령 유인 세제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연금 수령 유인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함
  - (퇴직연금 세제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퇴직연금 세제는 근로자 본인부담분 및 운용수익, 사용자부담분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연금 수령 유인이 미흡하여 일시금 수령이 여전히 선호되는 상황임
    - 근로자 본인부담분과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으로, 사용자부담분은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음
    - 퇴직연금 자산 축적분이 적어 연금 수령에 대한 세제 지원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임
    - 연금화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이 미흡하여 연금 수령 유인이 낮음
  - (주요국의 연금 수령 유도 세제 특징) 주요국은 퇴직연금의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중도인출 세제 벌칙 부과, 연금 수급 방식별 세제 차등화를 시도하고 있음
    - 미국, 영국, 호주, 덴마크 등은 미리 정해진 연금 수급 가능 연령 이전에 중도인출 할 경우 가산세, 고율과세, 한계세율 과세를 실시하고 있음

- 덴마크, 호주, 스위스는 일시금 수급에 대해 직접적인 세제 불이익을 부여하거나, 연금 수급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부여하고 있음
- (세제 개선 방안)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연금 수령 유도를 위해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 확대, 연금소득 수령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중도인출 및 해지에 대한 세제 별 칙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퇴직급여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 10년 초과 연금 수령을 선택할 경우 퇴직소득세 대비 감면율을 더욱 확대할 필요(<그림> 참조)
  - 연금소득 저율 분리과세 한도를 확대하거나, 중·저소득층의 연금 수령시 보조금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

\* 연금소득세율(3~5%) 적용 분리과세 한도인 1,200만원을 2,400만원으로 상향조정

-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대해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퇴직금을 이관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해지할 경우 부과되는 퇴직소득세 수준을 상향조정할 필요

<그림> 퇴직급여 사용자 부담금 10년 초과 연금 수령 선택 시 세제 혜택 상향조정



- (주제발표 2) : 김성일 경희대학교 박사는 “연금화 확대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 전략”이라는 주제로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함
  - (필요성) 공적연금의 개혁으로 퇴직연금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 퇴직급여의 연금화 비율이 매우 낮음
  - (제도 개선 방안) 퇴직연금 연금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건전한 이미지 제고, 기금형 요소가 가미된 지배구조 변경으로 가입자 참여 유도,

퇴직급여 제도의 단일화 조속 추진,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수급방안 모색. 퇴직 IRP 포함 중도인출의 합리적 제한,가입자교육 사업자 위탁 단계적 제고, 연금화를 위한 세제정책 개선, 가입자 보호와 연금화를 위한 전문자문제도 도입을 제시함

○ (주제발표 3) :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신뢰도 강화를 통한 연금화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퇴직연금의 연금화율 제고를 위한 퇴직연금 신뢰도 개선 방안을 제시함

- (필요성)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발전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퇴직연금의 연금화율이 미흡한 상황 등 제도의 신뢰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
- (제도 개선 방안) 퇴직연금 신뢰도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퇴직연금 수급권 강화, 퇴직연금의 규제 및 감독체계 강화 등을 제시함

## 붙임 1) 세미나 일정

일정	프로그램	
13:00~13:30	등 록	
	개 회 식	
13:30~13:45	개회사 이창수 회장 (한국연금학회) 축사 권문일 원장 (국민연금연구원) 환영사 안철경 원장 (보험연구원)	사회: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보험연구원)
	주제발표	
13:45~15:20	발표 1 : 김성일 박사 (경희대학교) "연금화 확대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 전략"  발표 2 : 유호선 연구위원 (국민연금연구원) "퇴직연금 신뢰도 강화를 통한 연금화 제고 방안"  발표 3 : 오병국 연구위원 (보험연구원) "주요국의 퇴직연금 연금 수령 유인 관련 세제 현황과 시사점"	좌장: 이항석 부회장 (한국연금학회)
15:20~15:30	휴식	
	종합토론	
15:30~16: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동현 과장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li> <li>• 박준범 박사 ((주)한국은퇴연금아카데미)</li> <li>• 오명수 박사 (김·장 법률사무소)</li> <li>• 이재현 교수 (승실대학교)</li> <li>• 전용일 교수 (성균관대학교)</li> </ul>	좌장: 이항석 부회장 (한국연금학회)
16:45~17:00	질의응답	
17:00	폐회	

## 붙임 2) 세미나 발표1, 2 자료 각 1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http://www.kiri.or.kr>)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